

22대 국회 첫 국감 오늘 개막... 여야 격돌 예고

야, '365국감' 김건희 의혹 총공세
여, 이재명 사법리스크 겨냥 역공
본질 퇴색 소모적 정쟁 반복 우려
광주·전남지역 오는 17일부터 진행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린 가운데, 여야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정조준하며 총공세를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화력을 쏟아붓는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열리는 이번 국감도 행정부에 대한 감시나 견제보다 소모적인 정쟁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사실상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기 위해 당력을 총동원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정감사를 '삼육오(365)국감'"이라며 "국민 눈높이·민생·끝장 국감 등 '3대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 회생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 관

광주·전남지역 주요 국감 일정			
상임위	날짜	장소	피감기관
교육위	17일(목)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전남도교육청·전남대·전남대병원
법사위	17일(목)	대전고법	광주고법·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대전고검	광주고검·광주지검
행안위	21일(월)	전남도청	전남도·전남경찰청
행안위	22일(화)	광주시청	광주시·광주경찰청
기재위	24일(목)	광주국세청	광주국세청·광주세관·광주조달청·호남통계청·한국은행 광주전남·목포본부

련으로 공천 및 인사 개입 의혹과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포함해 일반 증인·참고인 100명을 부르는 안건을 지난달 25일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100명 중 김 여사 관련 인물은 55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천 및 인사 개입 의혹 등에서 일반 증인을 의결했다. 국토위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업체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민주당은 출석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 문제를 여권의 최대

리스크로 판단하고, 스모킹건을 만들어내는 데 당력을 모으고 있다. 이를 특검법 추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들을 집중 규명하는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도 꾸렸다. 본부장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맡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생 국감'을 내세우면서도, 야권의 공세에 맞서 이재명 대표의 각종 사법리스크를 겨냥해 역공에 나선 전망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집권여당으로서 우리 민생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민생 국감을 지향하면서 집중적으로 각종 민생관련 이슈를 점검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국감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노규조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여당 법사위는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의 주요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옥 변호사 등을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를 둘러싼 취업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증인대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야당 반대로 보류됐다.

외통위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며 기싸움을 벌이는 중이다.

한편 광주와 전남지역 국감은 오는 17

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

17일 오전 교육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시교육청·전남도교육청, 오후에 전남대와 전남대병원 국감을 진행하고, 같은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전고법에서광주고법·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오후에는 대전고검에서 광주고검·광주지검 국감을 실시한다.

이어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전남도청에서 전남도·전남경찰청, 22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시·광주경찰청 국감을 연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광주국세청에서 광주국세청과 광주세관, 광주조달청, 호남통계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목포 본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총장축제 파이어아트 퍼레이드 제21회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 나흘째인 지난 5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파이어아트 전국 김양배 기자

강 시장 '남해안발전특별법' 결의 이끌어냈다

영호남 시도지사 제정 합의 큰 역할
"선언적 아닌 구체 성과 내자" 제안
'달빛동맹 경험' 영호남 공감대 얻어

강기정 광주시장이 최근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 결의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영호남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서울 한국경제인협회(FKI타워)에서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남해안권발전특별법'을 최우선적으로 제정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협력회의에는 광주시와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전남도, 전북도, 경남도,

경북도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92명 등 100명이 참석했다.

영호남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100명은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남해안권발전특별법'을 최우선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결의했다.

이 같은 결의에는 강기정 시장의 역할이 컸다는 후문이다.

강 시장은 이날 회의가 선언적 의미의 '영호남 상생협력'에 그치려 하자, 회의 말미에 "하나라도 구체적 성과를 내자"며 '남해안권발전특별법' 최우선 제정을 제안했다.

강 시장은 "광주와 대구는 공항특별법, 달빛절도 예타면제 특별법을 만들 때 목소를 겹고 했다. 선택과 집중, 송곳 같은

뾰족한 전략적 추진의 결과물이었다. 적어도 남해안권발전특별법은 무조건 하자고 결의해야 된다. 자기중심적으로 지역 현안 챙기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남해안권발전특별법 국회 통과를 제안했다.

이에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 의장인 박완수 경남지사가 즉각 호응하며,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의견을 물었다.

김영록 지사는 "100% 동의한다. 지방차원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화답했고,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남해안권발전특별법 국회 통과에 최우선으로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강기정 시장의 선택과 집중, 송곳 같은 전략적 추진이라는 '달빛동맹의 경험'이 영호남을 아우르는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경연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있다.

김양배 기자

영광 YEONGGWANG

E-MOBILITY EXPO

-모빌리티

엑스포

2024.10.17.목 - 10.20.일

영광지식산업센터 일원(대마산단)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영광군



KATECH 한국자동차연구원



KMA (사)한국스마트모빌리티협회

개막식 축하공연

2024. 10. 17. (목) 15:00 ~ 16:30

대마산단 엑스포 특별무대

완영사, 주재영상, 축하공연



박지안



도승



송상민



송상민

할인판매 행사 BLACKDAY

특별한 세일을 마음껏 즐겨보세요!

상품전자기, 오토바, 전기 자전거

최대 10.17.(목)~10.20.(일) 10:00~17:00

30~50%할인

매일매일 쏟아지는 경품 대잔치!

10.17.(목)~10.19.(토) 16:30~17:00

10.20.(일) 15:30~16:00

미래인재 과학축전

메이커 페스티벌·정촌공방

10.17.(목)~10.20.(일) 10:00~17:00

로봇공연 드론체험

10.17.(목)~10.20.(일) 10:00~17:00

블랙(글)스 메어쇼

10.18.(금) 16:00~16:30(30분간)

e-모빌리티 시승체험

10.17.(목)~10.20.(일) 10:00~17:00